

사흘 연속 조문한尹 대통령, 경찰 ‘112신고’ 미대응에 격노

국가가 ‘국민 생명·안전 보호’ 의지 국민 통제 법적·제도적 한계 보완 여권 내부서 이 장관·윤 청장 경질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사흘 연속 조문 행보를 이어가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에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용현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 타이 차림으로 흰 장갑을 끼고 국화꽃을 헌화한 뒤 묵념했고, 이후 희생자 사진과 편지 등을 읽어본 뒤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첫 날인 10월 31일 서울시청광장, 11월 1일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 바 있다.

아울러 1일 저녁에는 비공개 일정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장례식장을 찾아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기도 했다.

참사 이후 공식·비공식 일정으로 매일 희생자 분향소와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는 윤 대통령의 조문 행보는 국가예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5일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조문 행보의 배경에는 취임 전후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날

(1일)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조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보태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 기조도 달라진 모양새다. 신속한 사고수습과 무엇보다도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공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주최 측의 여부, 이 장관의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서는 사고 예

방을 위한 일체의 경위와 철저한 진상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의 발언이 이번 사고와 관계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이고, 아마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권한·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는 말은 메시지가 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묻자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 말한 포인트는 제도의 한계를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은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에 대해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에 대해 말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메시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이 압사 사고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 받은 후 격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1일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한 것도 윤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장관, 윤 청장에 대한 경질설이 여권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며 야권에서는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번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한 입장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백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112 신고 녹취록에 與野 ‘책임자 처벌’ 초점

사고 4시간 전부터 위기 상황 감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재발 방지”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경찰에 인원 통제를 요청하며 신고를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애도와 수습에 집중하던 정치권도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사고 당일(10월 29일) 저녁 6시 34분 최초 신고부터 저녁 10시 11분 신고까지 총 11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최초 신고부터 ‘압사’란 단어가 언급되는 등 시민들은 사고 4시간 전부터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을 직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날(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연쇄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것도 녹취록 공개에 따른 파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의회에서 “땀이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 4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기동대 병력 총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인파가 모일 수 있

는 행사에서 지자체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안)과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전봉민 의원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경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 주무부처장, 기초단체장에 있다며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전날(1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치고 대응 방향을 선회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은 과면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요구한 상태다.

또한 ▲경찰에 최초 신고 후 경찰 대응 미흡 ▲경찰청 시민단체, 언론 동향 보고 대외비 문건 작성 ▲이상민 장관, 박희영 구청장 책임회피성 발언 ▲정부의 끝없는 검은 리본 착용 지시 ▲사고와 사망자로 표현한 참사 분향소 명칭 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회의에서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 가족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백태홍 기자 pth7285@

尹 “北, 분명한 대가 치르도록 엄정 대응”

탄도미사일 도발에 긴급 NSC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 마련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직후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긴급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 동맹을 흔들며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참석자들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위원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특히 참석자들은 우리의 국가예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고 전했다. /백정익 기자

권익위, 이태원 참사 고충·민원상담 나서

민원분석·제도개선 방안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상담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민원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참사 이후 사고현장에 국민 고충 긴급대응반을 파견해 사고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국민권익위 차원의 사고 수습 지원 및 대응책을 강구했다.

또한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분향소 인근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를 배치하고,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상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 통합창구인 ‘국민콜 110’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실종 신고 접수 문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상담 ▲치료비 및 장례비 지원 ▲합동분향소 문의 등 국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과 민원을 상담 및 처리하고 있다.

/백태홍 기자